

공권력 주체 대통령 憲訴 자격 있나

盧대통령 헌법소원... 법적 쟁점과 청와대 입장

靑 “선관위 조치 대통령 기본권 제한”

“대통령은 정무직” 중립의무도 논란

노무현 대통령이 21일 최근 참여정 부평가포럼과 원광대 특강 및 인터뷰 발언 등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중립의 무 위반 결정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헌법소원 주체의 적격성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법리 논쟁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과 청와대는 선관위의 이런 조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정치적인 대통령 개인이 갖는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논리를 펴면서 대통령이 헌법소원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 헌법소원 낼 자격 있나 =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그 피해자가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이 같은 청구 주체를 근거로 국가 공권력의 행사자인 대통령은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는 게 야권과 법조계 일부의 논리다. 따라서 이들은 노 대통령의 헌법소원은 심판 청구자로서의 자격 자체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선거라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선출된 정치적 헌법기관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 또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기본권의 주체”라며 자격이 있다고 반박했다.

▷선관위의 조치가 공권력 행사인

가=노 대통령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법 준수요청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더라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선관위 조치에 대해 야권과 법조계 등에서는 노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선관위가 법에 따라 판단을 내린 것일 뿐 기본권을 제한한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 수석은 “선관위 조치는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대통령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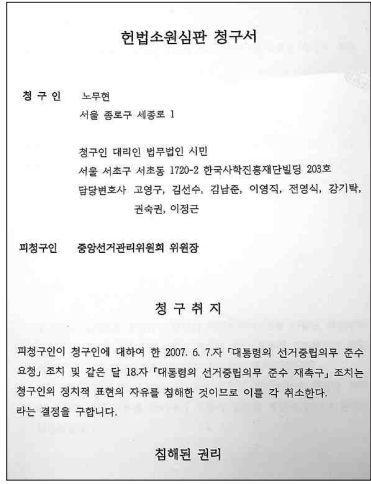
▷공직선거법 9조 위헌성 여부 =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9조를 적용, 노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을 결정했다.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등 발언이 공무원인 대통령으로서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라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9조는 지나치게 포괄적,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공무원으로서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예견하기 어렵고, 오로지 선관위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선법 제9조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원리인 명확성의 원칙, 필요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많아 위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주장이다.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해석 = 공선법 9조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공무원법 33조에 따르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

다. 특히 대통령은 정치적 활동과 선거 과정을 통해 선출됐고, 여당과 정부의 당정협의를 비롯한 대통령의 국정운영 자체가 정치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정치’와 ‘선거’의 경계선이 모호한 게 사실이고, 이 때문에 노 대통령의 최근 특강 발언 등을 계기로 공선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충돌성 논란이 심화됐다. /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소원 제기 대리인인 강기탁 변호사가 21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노 대통령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위는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노 대통령의 헌소 심판 청구서. /연합뉴스

정부 지원 타당성 여부 최대쟁점

F1특별법 오늘 국회 문광위 법안심사소위 심의

‘F1(포틀러 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F1특별법)이 22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된다.

문광위 법안심사소위는 당초 21일 F1특별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전병헌 위원장의 후임 위원장 선임 문제로 진통을 겪다 오전 11시께 회의를 열어 ‘뉴스 진흥에 관한 법률안’ 1건만 심의하고 산회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는 전남도와 지역주민의 요구 등을 감안해 32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F1특별법안의 순서를 바꿔 22일 첫 안건으로 심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소위를 거

쳐 오는 25일 전체회의 의결에 이어 법사위와 7월 초 본회의 통과 목표인 관련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영암군 삼호읍 삼포·난리리 일대 간척지에 들어설 F1경주장 건설에 따른 SOC(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 타당성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F1대회 주관사와 전남도의 권한행사 제약 등으로

불거진 불평등 계약 문제도 소위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2010년 첫 대회를 치르지 못하더라도 전남도가 개최권료로 360억원을 지불한다는 신용장을 개설해 준 것도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 상정여부가 불투명했던 ‘서남권발전특별법안’이 21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됨에 따라 본격적인 심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서남권발전특별법안은 공청회와 견교회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 등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미래 문화에 호기를 키우자

문화체험 수행평가 ‘겉치레’ 너도나도 팸플릿 구하기 행렬

☞ 학교는 문화예술교육 사각지대

광주국제공연예술제가 주최하는 ‘천원의 낭만’의 진행자 최지영(34)씨는 공연이 있을 때마다 중학생 관객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수행평가’ 때문에 억지로 공연장을 찾는 학생들의 경우 관람은 뒷전이고 공연장 분위기를 망쳐놓기 일쑤다. 머리가 아픈 건 최씨 뿐 만이 아니다. 공연 관계자, 특히 클래식 단체와 애호가들에게 ‘수행평가’는 공공의 적이다. 제대로 된 교육 없이 학생들만 달랑 공연장에 보내는 일선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공연계의 불만이 높은 건 당연지사다.

공연계 “학생들 오면 분위기만 망쳐요”

학교·학부모 ‘문화교육 마인드’ 갖춰야

어릴 때부터 문화에 대한 마인드를 키워주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수행평가’가 대표적이다. 현재 일부 중학생들은 1년에 1~2차례씩 수행평가 명목으로 음악회에 다녀온 후 팸플릿과 티켓, 감상문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공연장에서 진지하게 작품을 관람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 음악회가 열리는 날이면 아예 공연을 관람하지도 않고 팸플릿과 티켓을 구걸(?)하는 학생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아이들을 위해 부모가 나서 팸플릿과 티켓을 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감상문과 곡 해설은 인터넷을 뒤져 작성하면 그만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 문화예술 테마 체험학습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는 문화예술교육에 무관심하다.

3년간 문화예술위원회의 ‘신나는 예술 여행’ 프로그램으로 초·중·고교를 방문, 오페라를 공연하는 (사)빛소리오페라단 최덕식 단장은 쉽게 접할 수 없는 오페라 공연을 요청하는 학교가 많을 걸로 기대했지만 의외로 신청하는 학교가 적어 깜짝 놀랐다.

또 공연을 유치한 후 편안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 음악시간 등을 통해 미리 공연될 오페라를 소개하면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지만 관심을 갖는 교사가 거의 없어 아쉬웠다.

문화관광부의 예술인강사지원 제도에 따라 광주 한 초등학교에

서 연극을 가르치고 있는 K씨 역시 몇년간 여러곳에서 강의하며 학교의 무관심을 느꼈다. 특히 어릴 때부터 좀 더 많은 아이들이 문화와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되는 제도임에도 “특정 아이들이 상을 받도록 교육시켜 달라”는 등 ‘대회 입상’에만 관심을 갖는 교장도 있어 깜짝 놀랐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모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K씨는 “시골이 코앞인데 왜 아이에게 연극 수업을 시키냐며 수업 시간인데도 아이를 데려간 학부모도 있었다”며 혀를 내둘렀다.

전문가들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 공간과 충분한 수업 시간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과 교감,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체계적인 전문연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밖에 지난 5월 광주시, 광주시 교육청, 지역문화계 인사들이 꾸린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가 이듬해부터 단체가 아닌, 다양한 실천 방안들을 제시하는 단체가 돼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최덕식 단장은 “학교의 문화 예술교육이 활성화 되려면 무엇보다도 교장 선생님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며 “담당교사들도 귀찮아만 할 게 아니라 미래의 문화인들을 키운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쌍촌동 옛 기무부대 터 5·18 사적지 지정 광주시 시민공원 조성

광주의 옛 기무부대 터가 5·18사적지로 지정, 시민공원으로 지정된다. 광주시는 21일 5·18사적지보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80년 5월 당시 신군부의 사실상 지휘본부였던 기무부대 터를 사적지로 지정, 의결했다.

5·18 사적지는 1호인 전남대학교 정문을 비롯 광주의 광장, 금남로, 옛 전남도청 등 25곳에서 기무부대 터가

추가됨에 따라 26곳으로 늘었다. 지난 1974년 광주시 서구 쌍촌동 3만5천여㎡에 조성된 기무부대는 5·18 당시 광주학살을 지휘했던 신군부 본부다. 5·18의 중요 현장 중 하나다.

기무부대는 2005년 복구 오지동 31사단으로 이전했지만 5·18 당시 시민들이 고문을 당하고 조사를 받던 본안대와 강당, 행정동 등 시설은 그대

로 남아있다. 광주시는 사적지 지정에 따라 이곳을 시민공원으로 조성, 5·18 교육의 장과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계획이다. 시는 우선 국방부에 사적지 지정서 교부와 함께 사적지 표시석 등을 만든 뒤, 장기적으로 도시계획변경 등을 거쳐 시민공원으로 만들기로 했다. /최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우리가족 활력에너지

베콤씨

1일(아침·저녁) 2정 **우리가족의 힘 - 베콤씨**

유한양행

2007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선정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세 9차 3위 (제약부문 1위)

■ 베콤씨에 함유된 비타민B군과 비타민C는 수용성비타민으로서 체내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 유한양행 소비자 상담실 080-024-1188(수신자 요금부담) • 부산(051)462-4973 • 대구(053)752-0515 • 광주(062)382-5400 • 대전(042)627-9003 *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생활화합니다. (02-380-1658 www.kfda.go.kr)